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0~20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0~20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0~2011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80-1177)

인 쇄 처 (주) 늘품플러스

가 격 7,000원

ISBN 978-89-8479-599-0 9334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0~2011 ▶▶▶



# 목 차

I. 동북아정세 .....	1
1. 동북아 안보정세 .....	3
2. 북핵문제 .....	10
가. 2010년 상황평가 .....	10
나. 2011년도 전망 .....	12
3. 한국의 대외관계 .....	14
가. 한·미관계 .....	14
나. 한·중관계 .....	21
다. 한·일관계 .....	26
라. 한·러관계 .....	29
II. 북한정세 .....	35
1. 대내정세 .....	37
가. 정치동향 .....	37
나. 경제동향 .....	42
다. 사회동향 .....	47
라. 군사동향 .....	53

2. 대외관계 .....	59
가. 미·북관계 .....	59
나. 북·중관계 .....	62
다. 북·일관계 .....	67
라. 북·러관계 .....	71
3. 대남동향 .....	75

### Ⅲ. 남북한관계 .....

1. 남북대화 .....	81
2.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	84
가. 경제분야 .....	84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	88
다. 북한인권 및 인도주의 분야 .....	91
3.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간 긴장 고조 .....	98

부록: 2010년 주요 사건일지 .....	105
-------------------------	-----



I

동북아정세 ...





---

## 1. 동북아 안보정세

21세기 들어와 동북아에서는 과거 냉전 유산의 잔존에 따른 갈등과 대립, 미·중 패권경쟁,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과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 중국·대만의 갈등,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유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정세는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의 첨단화와 군비증강 추세,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의 기초를 띠면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대립·갈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공조의 이중성을 내포하면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9년 동북아정세는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립보다는 협력위주의 경향을 보였다. 2009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전략 경제대화’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 든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미국에서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면서, “나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미·중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선언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개막사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 등 주요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동북아정세는 군사안보적 대립은 물론 경제분야에까지 갈등을 빚는 등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대립과 갈등이 고조된 한해였다.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1월),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의 면담(2월),

구글(google)의 중국 사업 철수(3월), 동중국해 해상에서 영토분쟁 및 중국의 해상 훈련(6~7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북 편중태도(3월, 11월), 환울 문제(9~11월), 센카쿠 열도 분쟁(11월), 미국의 항공모함 및 핵 잠수함 서해 파견(11월) 등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미·중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후 한·미 양국은 7월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행 하였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 후 한·미 양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1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행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12월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의 미·일 연합 훈련을 실시하였고, 한국은 이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참관국으로 참가하였다. 중국도 한·미, 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을 7월 전후 서해와 중국 본토에서 실시하였고, 중국 동북 지역을 관할하는 선양군구 직할지역에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실시하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전략적 인내” 원칙을 견지하는 미국, 일본, 한국 등과 6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핵 문제를 풀려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천안함 폭침(3.26),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11월), 연평도 폭격 도발(11.23) 등이 6자 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중국은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2010년 11월 28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의 개최를 제의했다. 알렉세이 사조노프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은 12월 2일 러시아는 중국이 제

---

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이빙귀의 제안을 거부하고 북한의 도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외중에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에 미국 고위급인사들을 파견하여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였다. 일본도 다이빙귀 방한 직후 후쿠야마 테쓰로(福山哲郎) 관방 부장관(차관)이 기자들에게 “한국 및 미국과 협조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은 12월 6일(미국 현지시각)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3국 장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3국 장관들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해 도발행동 중단, 남북관계 개선, 정전협정 준수, 비핵화 의무 이행 등을 6자회담 재개의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우라늄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을 압박하던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의 더욱 충실한 이행과 필요할 경우 제재 강화라는 카드로 맞서면서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동북아에서 평화를 유지할 책임

---

은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대화와 협력이 유일하고 바른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처럼 주변국들은 북한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2010년도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구조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양능력이 확대되면 말라카 해협 등의 해양수송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개입하는 등 센카쿠 열도문제를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놓고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2010년 6월 동중국해 해상에서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7월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11월에는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재점화시켰다. 지금까지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외부세력, 특히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해 왔으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중 견제를 본격화하였다.

일본이 남중국해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해상통로의 안전확보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고려,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의 주도권확보 경쟁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안보협력 및 주변사태 개입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언론과 학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과 주변사태 법, 유사법제 법안 등을 통하여 방위협력 범위를 남중국해까지 확장하고 있다. 또한 해적

---

소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일본의 주도로 2004년 11월 아시아 해적퇴지협정(ReCAAP)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부터 말라카 해협연안국과의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해양세력의 기본원칙으로서 해상통로의 안전과 항해자유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은 외교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을 취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와 무력사용을 통한 영유권분쟁 해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 기존의 입장에서 적극 개입 정책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하면서 일본의 편에서 센카쿠 문제에 접근하였다.

2010년 2월 발표된 미국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핵심이익 해역으로 미국에게 통보하는 등 제1열도선(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의 연결선)을 넘어서 제2열도선(일본열도, 사이판, 괌의 연결선)으로 투사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하고, 동년 8월 16일 발표한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인도양 및 제2열도선을 넘어서 서태평양까지 작전행동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미·중 양국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는 한편, 중국의 국방근대화 계획을 주시하고 미국의 국익과 동맹국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부상은 인정하되, 중국의 부상이 다른 국가의 희생을 전제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2009년도 국무부 부장관 스테인버그의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의 연장선상에서 실행되었다.

따라서 2010년도 미국은 중국 견제를 한층 강화하여 동아시아 지역

---

에서 양자동맹을 강화시켰다.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2010년 7월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이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왔는데, 힐러리 국무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맹국인 필리핀 등 지역 국가와의 연대로 중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실려 있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는 2010년 하반기에 북방열도 문제로 대립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위안화 환율 절상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는 등 동북아 정세는 미국, 일본, 한국을 한편으로, 중국, 러시아 등이 다른 한편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미국은 동북아전략으로 ‘중심축과 바퀴살’ 동맹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 중국에 대한 헤징(hedging) 전략에 예년보다 더 강조점을 두면서 중국 포위압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2009년도 하반기 후진타오가 밝힌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견지하되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적극 추진하는 신외교의 영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변 지정학적 전략 거점을 구축하는 동북아전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도에도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상반된 관점이 대립하여 동북아정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 정세를 가름 짓는 상위적 체제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 있다. 그 하위체제로서는 북한문제, 쟁점 도서문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에는 북한 문제로 심각한 안보위기가 노정될 수 있다. 북한



---

핵능력 제고문제, 북한 승계문제 등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북한무력도발이 남북한 무력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동북아정세가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 황병덕 ·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박재적 ·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 2. 북핵문제

### 가. 2010년 상황평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한 2010년의 북핵문제는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으로 그 문을 열었다. 1월 11일 외무성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켜야 하며, 전쟁상태 종식의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1.11). 두 달 후 북한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등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비핵화 중단과 핵억제력 강화를 위협하면서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접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3월 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핵전쟁연습,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은 중단될 것이며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조선중앙통신, 3.7).

한편 5월 3~28일 뉴욕에서는 제8차 NPT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최종문서(Final Document)”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최종문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핵포기를 촉구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최종문서 이행상황 검토 부분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와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지구적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북한이 실시한 두 번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면서 북한이 핵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북

---

한이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6자회담에서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고 IAEA 보장조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역지를 제공할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확장역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확장역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권력승계 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확장역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다.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2010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동안 숨겨왔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공개한 것이다.

11월 2~6일 영변을 방문한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프리처드(Jack Prichard) 소장은 북한이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지을 예정이라는 건설책임자의 말을 전하면서, 영변단지 내 냉각탑이 있던 지역에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sup>1</sup> 일주일 뒤인 11월 9~13일 방북했던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영변을 방문하던 중 5MWe 흑연감속로의 핵연료를 생산하던 핵연료제조공장에서 1,000개가 넘는 원심분리기가 가동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

1 『연합뉴스』, 2010년 11월 17일. 프리처드 소장이 밝힌 100MW 규모는 열출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모의 열출력이면 전기출력 25~30MWe에 해당한다.

---

밝혔다. 해커 박사는 “초현대식 통제실(ultra-modern control room)”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이라는 북한 당국의 말도 전했다.

2009년 4월 미국 전문가들이 영변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원심분리 설비가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매우 신속하고 비밀리에 핵연료제조공장을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치 못한 속도와 시설규모를 고려할 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외국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며,<sup>2</sup> 제3의 장소에서 가동하던 설비의 일부를 옮겨왔거나 기존 설비를 토대로 새로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sup>3</sup>

## 나. 2011년도 전망

2011년 북핵문제는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과 같이 호전적인 대남전략을 토대로 북한이 6자회담 재개 등 평화공세를 동시에 전개하는 토대 위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 시설과 경수로 건설 카드는 관련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의 핵실험장 주변에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도 계속 보낼 것이다.

물론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

<sup>2</sup> David Sanger, “North Koreans unveil vast new plant for nuclear use,” *New York Times*, Nov. 20, 2010.

<sup>3</sup> 미국 국제과학안보연구소 (ISIS)의 분석, 『연합뉴스』, 2010년 11월 22일.

---

것이다. 원심분리기 시설과 경수로 건설 현장을 공개한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경수로 건설 권한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핵폐기 협상에서 대북 경수로 건설이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아울러 경수로를 거론하며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은 북핵협상이 재개되어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플루토늄 프로그램처럼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고농축우라늄 핵폭탄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과학기술적 업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3. 한국의 대외관계

#### 가. 한·미관계

2010년 한·미관계는 역대 어느 시기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에서부터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처,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밀한 협력을 이루었다. 또 한·미는 2010년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지원, 12월 3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에서 보듯이 서로의 필요에 대해 협력하였다. 한·미의 긴밀한 협력관계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정책과 오바마(Barack Obama) 정부의 동맹 강화에 기반을 둔 미국의 리더십 회복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한·미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주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전화통화로 협의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3.26)이 발생하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백악관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위로하고 미국의 전폭적 협력을 표명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의 제공을 다시 강조하였다. 또 양국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2010.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합동조사단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5월 18일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과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6일 캐나다 G20 정상회의(캐나다 토론토)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11월 2일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를 갖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과 한·미 FTA 관련 문제를 협의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관련 후속 협의, 경제협력 방안,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 관련 문제가 논의되었다.

북한이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무력공격을 감행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방안과 군사훈련에 관해 협의하였다.

한·미간에는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차원에서의 협력도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의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게이츠(Robert Gates) 국방장관이 동시 방한하여 한·미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의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이 7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동맹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의 집행과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였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7.25~28)’를 시작으로 향후 수개월에 걸친 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발표하였다.

외무장관 차원의 협력은 2월 26일 워싱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클린턴 국무장관 간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북핵 및 북한 문제, 한·미동맹 현안 및 한·미 FTA 문제, 서울 G20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10월 30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클

---

린턴 국무장관 간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및 북한문제, 서울 G20 정상회의 등과 관련해 협의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이틀 뒤인 11월 25일에는 김성환 장관과 클린턴 장관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북한의 우리농축 활동재개 등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어 12월 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외교장관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12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한문제 및 한·미 FTA 현안 등을 협의하였다.

한·미 국방 당국 간의 협력도 긴밀하게 진행되었다. 1월 28일 제24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5월 14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및 국방차관보급이 참여하는 2+2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10월 8일 워싱턴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 간에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합참의장 간의 제3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 당국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2+2 회의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포괄적 동맹 구축, 핵우산·재래식 타격·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등을 명문화한 『한·미 국방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을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사적 억지력 강



---

화차원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참여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였다. 또 멀리 미 합참의장이 방한하여 한민구 합참의장과 12월 8일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을 공동 평가하고 전략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였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간에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평화협정 체결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속도를 보일 것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 입장을 견지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8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이 증대되고,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국무부의 장관, 부장관, 동아·태차관보 등의 발언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협상 복귀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3월 26일 한국의 해군 천안함을 기습 침몰시킴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

의미 있는 대화를 갖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견지하였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5월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자, 미국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5월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 및 호전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대응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미국 상·하원도 조사 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월 9일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 직후,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면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하였다(백악관 성명, 7.9).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2+2 회담(7.21)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를 동해상에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lji-Freedom Guardian) 연습(8.16~26), 서해상에서의 대잠수함 훈련(9.27~10.1), 한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10.13~14), 한반도 서부 공역에서의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10.15~22) 등 일련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훈련은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억제 능력의 제고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시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4월 6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에서 기존의 ‘소극적 안전보장

---

(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을 개정, 강화된 NSA정책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NPT 체제와 같은 국제체제와 규범 및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은 이탈국가(outlier)로 규정하고, 강화된 NSA의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또 미국은 5월 2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재차 강조하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통한 국제사회의 합류 또는 고립의 심화라는 선택지를 선언하였다.

한·미간 통상협력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5월 18~19일 워싱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커크(Ron Kirk) 무역대표부 대표 간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 문제 등 양국 통상현안을 점검하였다. 이후 일본 센다이(9.23), 프랑스 파리(10.7), 미국 샌프란시스코(10.26), 서울(11.8~9) 등지에서 통상장관 간에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진행되었다. 마침내 11월 30일~12월 3일 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그 동안의 쟁점을 타결하고 합의를 이루어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자동차 세이프가드, 이산화탄소 연비 기준 등과 관련 이익을 얻었으며, 한국은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등과 관련 이익을 얻었다.

2011년에 한·미 양국 간에는 2010년에 이루어진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아시아정책의 중요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의 인정과 김정은 후계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

나타날 수 있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강건한 동맹 협조 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북한의 군사 도발 등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하여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경제 발전상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체제가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시작되는 미국의 새 의회 회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지배하게 되었다. 공화당은 북한에 대하여 매우 현실주의적인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수행해 온 원칙에 입각한 공세적인 대북 외교정책과 잘 조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긴급 현안으로 부상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계획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공동의 대응계획을 발전시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 양국의 국방당국 차원에서는 2010년에 합의된 대북 확장억제력의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될 것이고, 대북 억지력의 강화 및 시위 차원의 연합훈련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중국의 공세적인 정책과 북·중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 대응에서 보다 세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따른 한·미 양국의 의회 비준

---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 내에서는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의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반도의 상황과 미국의 국내정치 현실로 비추어 한미 한·미 FTA가 양국에서 의회의 비준 동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미간에는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

- 박영호 ·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나. 한·중관계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2000년 마늘 분쟁, 2004년 동북공정 갈등으로 마찰을 겪었지만, 2010년 올해만큼 관계가 경색된 적은 없었다고 평가된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올 한해는 양국 관계에 냉기류가 형성되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3.26)과 연평도 포격(11.23)이라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북한 감싸기 태도와 북·중 밀월 관계의 형성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키웠고, 중국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치우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한국과의 원활한 외교관계 구축을 희망해왔다. 올해 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매년 2회 정례화 시키는 데 합의(3.18)했으며, 한국 정부는 중국 방문의 해를 축하하고, 상하이 엑스포를 적극 지지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

중국 공산당 초청 방중(3.25~28),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용의 표명(4.6) 등 한·중간 협력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우호적 분위기의 한·중 관계는 북한 변수로 인해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그 출발점은 천안함 사건(3.26)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 중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4.30)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시종일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하면서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켰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5.3~7)을 허용하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에게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김정일 방중 허용은 내정문제이며 김 위원장 방중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라고 공표(5.6) 하면서 한국 측이 억측을 하고 있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은 한국의 언론들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조작 선동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5.20) 이후에도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북한 제재 동참에 대한 한국 측 희망과는 달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면 구성에 주력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한국방문(5.28) 당시 “중국정부는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 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여전히 중립적 태도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 방중(6.8) 회담에서도 중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보다는 한반

---

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자,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한을 특정해 규탄하는 데 끝까지 반대하면서 중재를 이루어냈고, 천안함 사건 국면 전환을 위한 6자회담 조기재개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선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 재개’를 고수하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발표 등 북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했다. 이에 중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사전부터 여론몰이를 통해 이 군사훈련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적 존엄성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전례 없는 강한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더욱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전에 실탄을 발표하는 선재 군사훈련(6.30~7.5)을 단행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하기도 했다. 주요 언론들은 “서해 훈련을 계획하는 한국이 자신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을 잠재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발 속에서 한국은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시켰고(7.25~28) 중국 역시 그 기간을 즈음해 서해 인접지역에서 장거리 로켓포 발사훈련, 남중국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해서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다. 또한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결연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관영언론들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비판들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 인민일보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기고문을 게재(8.4) 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다.

한·중관계는 중국이 천안함 사건이후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

계를 강화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은 김정일의 2차 방중(8.26~30) 허용 외에도,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고위급 인사의 방북(10.9~11) 중국 차기지도자로 거론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사에서 북·중 혈맹을 강조하는 등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층에서 심상치 않은 북한과의 혈맹관계 복원 행보가 잇따르자 한국 정부 안팎에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대두되었고 중국의 북한 편들기 측면이 도가 지나치다는 발언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11.27)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명명백백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중국은 천안함 사건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다이빙귀(戴秉國)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전격 방한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립적 태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중국 언론 등은 연평도 포격이 한국의 호국훈련에 대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한 입장 이해보다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을 견인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인식 차이 때문에 2011년 한·중 관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자세는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강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압력과 질책에 대해 중국의 북한 감싸기 태도는 한·중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외교 안보 분야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협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중 경제관계는 2010년에도 여전히 원활하게 진행



되어 왔다. 2010년 10월까지 한국의 대중수출은 약 951억 달러, 수입은 약 581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7.1%, 32.4% 증가한 수치로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자국의 동북 3성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투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올해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6.28)가 마무리되고,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FTA 문제를 두고 양국 간의 협력문제가 중요시될 것이다. 경제적 교류 외에도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중국 측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 협력적 행보를 보여 주었으며, 3차 한·중 고위 전략대화(9.29)를 통해 양국 간의 통상 및 문화 인적 교류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속 발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전략대화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려는 안들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양국 경제문화 교류 외에 외교안보 교류에 있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소통과 협력의 기제는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자문단과의 간담회(12.1)에서 우리 전문가와 언론들이 한·미 대 북·중의 평가르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중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친 바도 있다. 또한 2011년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협력구도가 이루어진다면, 한·중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 혹은 핵실험 등이 단행될 경우에도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관계의 갈등 구도는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기현 ·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 다. 한·일관계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처리 △영주 외국인  
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북한에 의한 납치 및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양호한 한·일관계의 재구축 △한·일의 신뢰관계 강화 및 한·중·  
일의 강력한 신뢰협력관계 구축 등을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의 전향  
적 태도와 더불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듯이, 하토야마 내각  
은 ‘신(新) 동아시아 시대’의 기를 마련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을  
지향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하면서 한·일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  
였다.

하토야마 내각의 한·일관계 중시 전략은 간 내각에서도 이어졌다.  
간 나오토 총리의 취임 직후,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6.26~27)  
를 계기로 이명박-간 나오토 토론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간 나오토 총리는 “금년이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반성할 것을 반성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간 나오토 총리는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8.10)”를  
통하여 한국인의 뜻을 “거스른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큰 손해와 고통  
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하였고,  
아울러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가까운 시  
일내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으로, 2010년도의 한·일관계는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  
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전개해 왔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한·일

---

의 긴밀하고도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전개되었다.

먼저, 경제분야를 살펴보면, 2010년에 접어들면서 한·일 FTA 체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경단련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과와의 면담(1.15)에서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교역이 여타 주요 교역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을 평가하면서 한·일 교역의 균형 달성 관점에서 한·일 FTA의 체결문제를 논의하였다.

한·일 FTA 문제는 5월의 한·일 통상장관회담(5.23)에서도 논의되었다. 한·일 통상장관은 한·일 교역의 확대 균형을 위해 부품·소재 등 산업 협력증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일 FTA의 추진문제를 논의하였다.

한·일 FTA 문제는 6월에 간 내각이 출범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의되었고, 9월에는 실무급 국장협약에서 한층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5월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한·일 FTA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고위급으로 격상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1차 한·일 FTA 국장급 협약이 9월 16일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협약에서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및 △비관세 장벽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한·일 FTA문제는 토론토 한·일 정상회담(6.26), 요코하마 한·일 정상회담(1.14)에서도 논의되었다. 특히,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11.13~14)를 계기로 11월 14일 오전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을 강조하였다.

문화면에서 한·일관계를 살펴보면, 한류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

일본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40~50대의 여성 세대 중심이었던 한류 붐이 한국의 걸그룹 등의 활동에 의해 젊은세대는 물론, 남성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 문화재의 반환 결정으로 한·일관계는 한층 성숙되게 되었다.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8.10)”를 통하여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내에 인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1월 14일의 요코하마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문화재 인도를 위한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즉, 요코하마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한·일 외교장관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205권을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도서 반환”을 계기로 “한·일 양국간 문화재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협력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역사 문화재 등의 반환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일관계는 그다지 갈등을 겪지 않고 우호적으로 전개되었다. 하토야마 내각에서는 4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여 민주당 간부들이 불참하였고, 5월에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관련하여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일본의 강제적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이어 간 내각에서도 8월 및 10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여 민주당 간부들이 불참하였다. 그리고, 간 나오토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담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8.10)”를 발표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진일보환 노력으로 긍정적 평가를 표명하였다.

요컨대, 2010년의 한·일관계는 과거와 같이 역사 문제로 인해 그다

---

지 갈등을 겪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매우 긴밀한 공조를 과시하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행위에 대해 일본은 즉시 북한을 비난하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또,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문제에 대응하였고,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서도 한국과 함께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도 한·일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 미·일동맹의 강화 등으로 인해 한·일 안보관계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정호 ·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 라. 한·러관계

한·러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과 고위인사 교류 및 차관급 전략대화,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확대하였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당시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연평도 포격사건에는 북한을 명백히 비난하였다. 경제면에서 한·러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러시아 경제의 회복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치면에서 양국 정상은 4차례(워싱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4.12~13;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9.10; 서울 G20 정상회의, 11.11~12; 요코하마 제18차 APEC 정상회의, 11.13~14)의 회동을 통해 인적 유대를 긴밀히 하였다. 제2차 차관급 전략대화가 모스크바에서 신각수

---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데니소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 간에 개최(3.29)되었다. 양측은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안전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한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11차 한·러 포럼(5.31~6.1)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어 과거 20년의 양국 관계를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천안함 사태와 북핵문제 등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하고 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하여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정상회담(9.10)에서는 에너지·자원,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러시아 경제현대화, 서울 G20 정상회의 등 양국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성공의 원동력,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과제, 한국의 과제와 선진화, 지구 운명공동체, 러시아의 잠재력과 가능성, 미래지향적 한·러관계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교환(9.30)하였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11.11~12)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11.10)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통상·자원·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안정 방안 등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롯데 호텔에서 열린 한·러 민관산학 협의체인 ‘한·러 대화 포럼’ 폐막식에도 참석하였다.

안보·군사 면에서 러시아는 한·러 차관급 전략대화(3.29)를 통해 ‘선

---

6자회담 복귀, 후 제재 해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이행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3.26)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 대북 추가제재를 모색하였으나,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제재의 경우 완전 고립될 것을 우려해 제재에는 반대하였다. 그리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6.3)하였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이 방한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사(5.31~6.7)를 벌이는 한편, 러시아 정부는 캐나다 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비난하는 공동성명(6.26)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써 의장성명이 채택(7.9)되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자체조사 이후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는 “천안함 사건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만족하고 사안을 종결해야 할 것”이며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구전략”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10.6).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11.23)과 관련,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이윤호 주러 대사와 회동(11.29)하고 사상자를 수반하고 있는 남한 영토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비난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과 야기된 긴장이 신속히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면에서 신각수 제1차관은 모스크바 차관급 전략대화를 계기로 러시아 이민청장을 만나(3.29) 러시아 내 고려인 국적 취득과 관련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심화를

위해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의 노동 허가과 체류 허가를 쉽게 하는 ‘한·러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 협정’을 제안했고 러시아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양측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에너지장관 회담(5.21)을 개최하고 러시아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도입 문제를 다룰 양국 정부 차원의 협의채널 구성 등에 관한 공동의 사록에 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시 러시아 고위인사들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푸틴 총리와의 회동(9.9)에서는 에너지·자원, 시베리아 극동 개발 및 교역·투자, 자동차, 과학기술, TKR-TSR과 가스관 연결 등의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였다. 러시아의 유력한 경제인 12명과 간담회(9.9)에서는 경제현대화 5대 분야(①에너지 효율화, ②원자력, ③의료기기·기술, ④우주·통신, ⑤전략정보기술)에서의 실질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자원, 시베리아 극동 개발, 러시아산 가스 도입, 조선소 건설, 자동차 산업 지원,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푸틴 총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식(9.21)에 참석하였다.

2011년 한·러 양국은 수교이후 이룩한 20년 간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 안보,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의 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할 전망이다. 야로슬라블 정상회담에서 청와대와 크레믈린 외교안보 관계자 간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양국은 북핵과



---

미사일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악화되었던 러시아 경제가 다시 회복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자원·과학기술 협력,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인곤 ·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 II

북한정세...





---

## 1. 대내정세

### 가. 정치동향

2010년 북한 정치정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1980년 노동당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후계자가 공식화된 것이다. 북한은 2010년 초부터 김정은으로의 공식화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4월 14일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재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김정은은 찬양노래인 ‘발걸음’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행사종료시 합창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은 9월 27일 대장칭호 수여, 9월 28일 당대표자회 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및 당 중앙위원에 임명되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당·군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고,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 지휘관’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이후 김정일 현지도도를 수행하여, 그의 후계자로서의 존재를 과시하였다. 김정은은 12월 2일 현재 총 28회(군 5회, 경제 5회, 대외 3회, 기타 15회)의 ‘실무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뚜렷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이미지를 활용, 정치적 정통성을 회복하려 하였다. 머리 모양과 체구를 김일성과 유사하도록 만든 것이 그 예이다. 11월 8일 북한 조평통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오익제는 “청년대장동지의 영

---

상을 뵙고 보니 김일성 주석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다시 뵈옵는 것만 같았다”라고 말하여 김정은의 김일성 형상화 작업을 뒷받침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하여 1966년 이후 44년만인 9월 28일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 요직의 결원이 보충되었고, 당의 역할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당대표자회 결과,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재추대되었고, 김정은과 리영호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5명이 선임되었다. 김정은과 함께 ‘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당 경공업부장)는 당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 겸임)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이 되었다.

정치국 위원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최영림·조명록·리영호·김영춘·전병호·김국태·김기남·최태복·양형섭·강석주·변영립·리용무·주상성·홍석형·김경희 등 17명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장성택 외에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주규창·리태남·김락희·태종수·김평해·우동춘·김정각·박정순·김창섭·문경덕 등 15명이 선임되었다. 특히 리영호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등의 요직을 여러 개 차지해 군부의 새로운 ‘실세’로 급부상하였다.

모두 4명이던 비서국 비서 중에는 김기남·최태복 2명만 재임명되고, 여기에다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를 비롯해 문경덕·박도춘·김영일·김양건·김평해·태종수·홍석형까지 8명이 새로 비서로 임명됐으나, 누가 어떤 분야 업무를 전담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당 부장

---

으로는 기존의 장성택·리영수·홍석형·김경희·오일정·김양진·김정임·채희정·태종수 등이 건재한 가운데 김기남 비서와 김평해·주규창·최희정 4명이 새로 선임되었다.

당 대표자회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도 채택,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 전일체로서,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제했다.” 북한이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규약상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삭제하는 등 당규 일부를 개정하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헌법을 개정, 헌법 조문상의 ‘공산주의’란 단어를 모두 삭제한 바 있다.

공개된 조선노동당의 개정 당규약 서문을 보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또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되었다.

당대표자회에 앞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연내에 2회 개최(4.9, 6.7)하였는데, 한번은 통상적인 사항을, 다른 한번은 내각, 국방위 등 국가기구 인사문제를 처리하였다. 4월 9일 개최된 제12기 2차 회의는 김정일이 불참한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산과 예산, 헌법 조문 일부 개정 등을 논의하였다. 6월 7일 개최된 제12기 3차 회의는 김정일 참석하에 개최되어 내각 총리 및 내각 성원 교체, 장성택의 국방위 부위원장 선거 등을 처리하였다. 주목할 것은 장성택이 2009년 이후 1년만에 부위원장으로 승진되어 김정은 세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

---

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새 내각 총리에 최영림이 임명되었고, 내각 부총리였던 곽범기, 오수용, 박명선 3명이 해임되고, 강능수 노동당 부장과 김락희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전하철 당 중앙위 위원 4명이 새로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또 조병주 기계공업상과 한광복 전자공업상에 내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해,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종전의 내각 부총리 5명 가운데 로두철, 박수길 2명은 유임되었다. 장성택의 부위원장 승진으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의 부위원장은 종전의 리용무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부위원장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방위 위원 숫자는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5.14, 해임)과 장성택 자리가 없어서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밖에 안정수가 경공업상에,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성 국장이 식료일용공업상에, 박명철 국방위 참사가 체육상에 임명되고, 전임인 리주오 경공업상과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은 해임되었다.

한편, 9월 23일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되었고,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외무성 제1부상에,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참사도 외무성 부상에 각각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외무성의 대미외교라인이 모두 승진하였다.

당·정의 인사와 함께 군 인사도 병행 추진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4월 14일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을 맞아 최고인민사령관 자격으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제0045호’를



하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장 승진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남한의 국가정보원) 수석부부장 겸 국방위원, 리병철 공군사령관, 정명도 해군사령관, 정호균 전 포병사령관 4명이었는데, 특히 우동측은 작년 4월 군 장성 인사 때 상장으로 승진한 후 다시 1년만에 대장에 올랐다. 이밖에 최경성·최상려·한창순·전창복·오철산 5명이 상장으로, 리주홍·김수길 등 8명이 중장으로, 함룡철·손경복 등 83명이 소장(남한의 국가정보원 준장)으로 승진했다. 9월 27일에는 김경희·김정은·최용해 등 3명이 대장에 임명되었다. 당대표자회 하루 전날에 민간인인 김정은·김경희·최용해 등에게 대장 칭호를 준 것은 다분히 3대 세습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김정일 동향과 관련해서는 12월 2일 현재 그는 총 144회의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공개활동을 한 작년 동기(148회)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은 통치활동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한다. 김정일이 단기간에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으나, 과로, 흡연 등으로 뇌졸중 후유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김정일은 이례적으로 한해 2번이나 중국을 방문,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였다. 1차는 5.3(월)~5.7(금)이었는데 단둥 → 다롄 → 톈진 → 베이징 → 심양이 경로였고, 후진타오 주석과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무역협력 강화 등을 협의하였고, 특히 김정일은 북·중 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다”라고 언급, 후계문제를 암시하였다. 아울러 당시 천안함 사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방증인 것으로 보인다.

2차 방중은 8.26(목)~30(월)이었는데 「신의주 → 단둥」 코스가 아닌 「북한 만포 → 중국 집안 → 길림 → 장춘 → 하얼빈 → 도문」 코스

---

였다. 3개월 만에 재방중한 김정일은 중국과 국제 및 동북아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북·중 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재강조하였으며,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이 방북한 시점에 동북 3성 지역을 방문, 대미 불만 표시와 함께 북·중간 ‘혈맹’을 과시하는 행보를 하였다.

2011년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강화 즉, ‘3대 세습’의 공고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상화의 일환으로 김정은 혁명사적 자료 발굴, 혁명 도록 작성, 초상화 배포, 호칭격상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진입, 국방위원회 직책 획득, 차수 승진 등 최고 지도자로서의 지위 강화와 함께 정치적 안정을 위한 간부 인사 및 숙정, 용맹성 과시를 위한 대외 강경책 구사, 인민경제 생활을 통한 환심 획득 정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김정일이 자신이 보유한 지위(총비서,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등) 중 그 어떠한 것도 김정은에게 승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 승계 작업은 진행형이 될 것이고 김정일 유고시 주요 파워엘리트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전현준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나. 경제동향

2010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경제정책 중점 추진방향으로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생산 증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

것으로 강조하였다. 그동안 ‘인민생활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공동시설 제목에서 강조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4.9)에서 논의된 예산 배정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농업 부문은 지난해 6.9%에서 9.4%로, 경공업 부문은 지난해 5.6%에서 10.1%로 각각 증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경제 전반이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별한 전략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조되고 있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증산은 매우 공허하게 들려온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경공업부문의 추진과제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 생산능력을 늘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고 강조하였으며, 전력 증산을 위해 “화력발전소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희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자고 역설하였다. 또한 기계공업부문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구혁명을 일으켜 성능 높은 첨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

---

산”하자고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변화를 기대했던 대외경제정책 부문에서는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북한경제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문과 부정적인 부문이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전력 생산과 석탄 생산, 그리고 건설부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문은 농업부문과 상업·유통부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업·유통부문의 부진은 지난 해 단행된 화폐개혁의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등숙기의 일조 부족과 생육초기의 저온 현상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지난해 비해 30만톤 정도 줄어든 411만 톤(정곡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FAO와 WFP는 2010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533만 톤(조곡기준, 정곡기준 412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다른 평가를 내 놓고 있어서 다소의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다.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의 실적은 천안함사건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교역(1~10월)은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하였고 북·중무역(1~10월)은 북한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 8~11월 중 무역통계를 공표하지 않고 있어 북·중무역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남북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년도의 교역액이 작은 데다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 관련 반출입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북·중무

---

역 증가는 북·중관계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 중의 하나는 2009년 11월 30일에 단행되었던 화폐개혁의 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1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화폐개혁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식부문에서의 상품 공급 능력을 확보한 이후에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후유증이 커졌으며,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서 사회불안 요소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폐개혁의 주요 파급 효과로는 소득의 재분배 현상과 공장가동률의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안정성 훼손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환 금액의 제한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보유한 현금을 국가가 탈취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의 과도한 인플레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화폐발행을 통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생적 시장세력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시장의 추동력을 상당부분 훼손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2011년 북한의 경제정책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생산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보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강화하여 경제질서와 통제력을 회복, 그리고 해외자본의 유입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가장 고민하게 될 부분 중의 하나는 경제적 궁핍의 지속 및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후계자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1년 북한당국은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생산 능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선심성 정책수단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물량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가져올 국가재정 부족 등의 후유증을 북한당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중국에 의존도 증대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으로서는 2011년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위한 내부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재 규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2010년 11월 말경부터 집중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한 논리는 ‘자력갱생적 강성대국’으로,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 고리는 경제의 부흥, 인민생활의 향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기반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언론들이 2010년 경제성과를 선전하면서도 자립경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공정을 통한 주체비료 생산,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주체섬유 생산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2012년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의 생산체계를 확립한 점과 ‘실험용 경수로’의 완공 등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강택 ·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다. 사회동향

2010년 북한 사회 부문의 특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사상교양 및 주민통제 강화, 화폐개혁에 따른 주민생활고 심화 및 사회적 불만 증대, 북·중 문화·관광 교류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2010년 신년사를 통해 사상교양사업 강화로 주민들의 정신력을 고조시킴으로써 강성대국 건설 과업을 달성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상교양 강화의 과업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김정은 후계 체제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상교양 및 선전사업은 9월 당대표자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후계자 김정은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보도매체 선전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로동신문 정론(‘무궁토록 조선은 빛나라!’, 로동신문, 10.4; ‘혁명의 불보라’, 로동신문, 10.16)을 통해

---

김일성의 직계라는 김정은의 혈통 및 김일성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그의 영도능력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을 대동하고 현지지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전면 공개되고 있다. 대북민간단체에 의하면 평양 조선혁명박물관에 김정은관(館)이 설치되었고, 일부 군대 내의 혁명역사연구실에도 김정은의 영도업적 사진이 등장하였다고 한다(열린북한방송, 10.19; 북한인민해방전선 정보국, 11.19).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관하여 일반 주민들은 큰 기대나 저항을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면서도 비교적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습 비판 낙서와 유인물이 발견되는 등 비판적 여론 조성 사례가 대북민간단체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여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비어 유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강연회와 제3방송을 통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체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에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개편하여 주민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주민들의 도강과 탈북이 증가하고 이를 뇌물로 무마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민보안성 산하 주민등록처를 2010년 1월에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하고(오늘의 북한소식, 1.5), 주민등록 재확인사업을 통해 행방불명자·탈북자 파악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당대표자회를 전후하여 국경 통제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제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국주의 사상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정보 접촉 매개체인 MP3, DVD·CD플레이어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합동검열단’을 조직하여 외국 영상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

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7.21; 데일리 NK, 7.27).

한편, 간부층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11월에는 함경북도 당 조직부와 검열위원회가 무산군에 대한 집중검열을 벌여, 군당과 보안서, 보안기관 등의 간부 15명 이상을 탈북 목인, 뇌물수수, 밀무역 등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NK 지식인연대, 11.16). 김정은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비리간부 검열사업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비리간부들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수탈을 자행하는 간부들에 대한 주민불만이 권력 핵심부에 대한 불만으로 진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직후 북한 당국은 배급, 임금 지급과 국가상업망을 통한 상품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시장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청진 수남시장을 비롯한 일부 도매시장의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농민시장관리를 운영할 데 대하여”라는 중앙당의 방침을 발표하여 1월 14일부터 시장관리운영을 열흘마다 한번씩 열리는 농민시장 형태로 변경하고, 공업품 및 중국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오늘의 북한소식, 1.6, 1.12, 1.26). 그러나 시장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화폐개혁의 여파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배급과 임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불만이 팽배해졌다. 북한 당국은 식량가격이 폭등하자 2월부터 시장에 대한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고, 5월 26일에는 당지시로 시장 운영 시간, 시장 매매물품, 장사 연령 제한을 사실상 철폐하였다(오늘의 북한소식, 6.14).

---

결국 시장 폐쇄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복구라는 화폐개혁의 당초 의도는 관철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화폐개혁으로 시장활동 자본금을 회수당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박탈감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구화폐를 소각하는 것과 같은 저항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시장 통제 조치가 완화된 이후에도 화폐개혁의 여파로 인해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1월 중순 100원대였던 시장 쌀가격은 2월초 300원대, 2월말 500원대, 3월초 1,000원대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5월 이후에는 400~500원대로 안정세를 되찾았다가 8월에는 다시 1,000원대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민들, 특히 극빈계층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150일 전투(4.20~9.16), 100일 전투(9.23~12.31) 등 계속되는 노력동원 또한 주민들의 피로와 불만을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 부문에서는 북·중 문화교류협력을 비롯한 문화·관광 부문의 국제교류가 두드러졌다. 특히 북한 가극단의 중국 가극 개작과 중국 순회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피바다가극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2010년 5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13개 도시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대형가극 홍루몽의 중국 순회공연을 실시하였다. 가극 홍루몽은 중국의 고전 ‘홍루몽’을 원전으로 하여 2008년에 무대장치, 미술, 의상, 안무 등에 관한 중국 전문가의 협조 하에 재창작된 작품이다. 또한 피바다가극단은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중국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를 개작하여 공연했는데, 이를 관람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 60돌

---

이 되는 때 중국 동지들의 협조를 받아 또 한 편의 가극을 완성한 것은 아주 좋은 일(조선중앙통신, 10.19)”이라며, 북·중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평양예술단도 8월 말부터 3개월에 걸쳐 상하이 등 26개 도시에서 30여 차례의 순회공연 및 중국 공연단과의 합동공연을 하였다. 또한, 8월 평양에서 개막된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에는 처음으로 북·중 친선관계를 소재로 한 ‘친선아리랑’이 추가되었다. 이 공연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호의 의미로 판다가 등장했고, ‘조·중 우의는 근원이 오래고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것이다’ 등의 글자를 새긴 카드섹션이 이루어졌다.

북·중간의 관광협력도 크게 진전되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당시 체결한 북·중간 관광활성화 협약에 따라, 중국은 2010년 4월부터 북한을 단체관광지로 재허용하고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여유국에서는 ‘동북지구 관광업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선양-단둥-평양 관광노선에 이어 바이산-창바이-혜산 노선과 예진-훈춘-팡촨-라진-청진 관광노선이 해외 중점노선 개발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북한 조선관광사 엔지대표처가 4월부터 엔지에서 비자 발급을 시작하고(길림일보, 4.26), 룡징시가 그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던 북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연변주의 8개시와 현 거주자는 물론 외지인들에게까지 확대함에 따라 평양 및 변경 관관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북·중간의 문화교류 이외에도, 2010년 2월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에서 러시아 고전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을 재창작하여 공연하였고, 6월에는 동평양대극장에서 조로경제문화협정 체결 61주년을 기념하여

---

공연하는 등 을 한해 북한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1년 북한 사회 정세의 두 가지 키워드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기반 확보와 민생 안정이다. 2011년에는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한 사상교양이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직장, 학교, 군대 등 주요 조직단위에서 세습의 정당성과 김정은의 통치능력 및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교양·선전이 강화될 것이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직결된 경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공동 현지지도와 같은 ‘인민행 행보’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지도자상을 부각시켜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된데 따른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고 주민들 속에서 후계체제의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생활수준 향상에 주민들의 주된 관심이 쏠려있고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있는 북한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상교양과 정치적 선전만으로는 결코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주민 지지 확보의 관건은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핵심적으로 천명된 바 있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여부이다. 즉 화폐개혁 이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만 세습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개혁의 실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는 물질적 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전면 활성화하거나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중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비롯한 북·중관

---

계 강화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식량 공급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출로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조정아 ·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 라. 군사동향

2010년도 북한의 군사활동은 군사적 긴장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을 찾아 남한 지역 공격 상황을 상정한 가상훈련을 참관하였다는 소식을 부각, 선전하였다. 1월 5일 김 위원장의 탱크사단 시찰 뉴스를 북한 조선중앙TV가 전하면서 남한 지명과 고속도로 명칭, 구간 거리 등이 선명하게 쓰인 표지판 옆을 탱크가 달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사진을 내놓았다.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이자 당시 사단장이었던 ‘류경수’의 이름을 딴 이 탱크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 부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탱크부대의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여 대내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통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전쟁분위기 조성은 서해해상에서의 포공격 위협으로 이어졌다. 먼저 북한 군당국은 1월 25일에서 3월 29일까지 백령도 인근 근해에 항행금지지역을 선포(1.25)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군은 백령도 및 대청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향해 해안포는 물론 방사포(다연장로켓), 자주포까지 동원해 최소 300발 이상의 ‘투망식’ 동시 탄착 사격을 가했다(1.27). 28일에도 연평도 인근에서 포사격이 실시되었다. 웅진반도 등 해안과 섬에 배치된 130mm 해안포(사거리 27~

---

34km) 외에 240mm 방사포(사거리 60여km), 170mm 자주포(사거리 54km) 등이 사격에 모두 투입된 것 보인다. 북한은 서해 NLL 인근 해안의 주요 포병부대에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 수십문을 전진 배치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2.19)한 ‘국방업무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1월 27~29일까지 포사격 도발 후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훈련활동을 늘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진 배치한 240mm 방사포는 사정거리 60km의 포탄을 다량으로 발사할 수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다. 방사포는 12~22개의 발사관에서 길이 5m 정도의 로켓포탄을 35분간 22발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에 이어 2월 4일 동서해상 5곳을 해상 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해상사격구역은 함경남도 금야군 앞 동해상과 서해 교동도 서부 해상, 평안북도 철산군(2곳)과 선천군 앞 서해상이다. 2월 19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포함한 동·서해상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NLL 인근 해상 등 서해 4곳과 함경북도 등 동해상 4곳에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해상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브텍스(NAVTEX)를 통해 알렸다. 북한이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백령도 북방 NLL 인근, 대청도 동방 NLL 인근, 옹도 근해 NLL 인근, 황해남도 청단군 구월리 해상 등 서해 4곳과 함북 홍원군 호남리와 함북 경성군 룡암리, 함남 금야군, 강원도 원산 해상 등 동해 4곳이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3월 8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서 “조선 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은 만단의 전투동원

---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보도’ 형식의 발표를 통해 “전연(전방)과 해안, 대공 감시근무를 수행하는 인민군 장병들은 선제타격을 노리는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격파분쇄할 수 있도록 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북한은 작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되자 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실 것”을 명령한 바 있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L) 군사연습 때도 최고사령부 명령으로 ‘전군·전민·전국 특별경계태세’를 지시했다. 북한은 승조원 104명이 타고 있던 1천200t급 초계함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폭침(3.26)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4월 7일부터 북한은 전군(全軍)·전민(全民)에 대한 비상전시태세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8월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117발의 해안포를 사격(8.9)을 가했으며 이 중 1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관할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전선서부지구사령부’의 통고문을 통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주장(8.3)했다. 훈련이 시작된 8월 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도발자들과 아성을 짓뭇개 놓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로동신문(8.7)은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위협했다. 11월 23일에는 급기야 연평도에 해안포를 퍼부은 북한의 군사공격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인민군 포탄이 떨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러한 포 공격을 뒷받침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거리 27km 정도로 분당 6발을 쏠 수 있는 130mm 대구경포와 사정거리 12km로 분당 8발을 쏠 수 있는

---

76.2mm포가 대표적인 해안포에 속한다. 이밖에 사정거리 17~24km인 100mm포와 122mm포, 75mm 평곡사포 등의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5,100여문이던 방사포를 5,200여문으로 100여문 증강했다고 한다. 1년 사이 야포와 전차를 각각 2천 100여문, 300여대를 증강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별된 북한군의 야포는 모두 1만 600여문, 전차는 4천 200여대 정도라고 한다. 북한은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 전차를 개발해 작전 배치했으며 교체된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갑차는 2천100여대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전 부대를 담당하는 정보교도지도국을 '11군단'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특수전 부대는 7개 사단, 25개 여단 규모이며, 특수전 병력은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군 전력도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공군은 최근 자동화 방공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요격 대응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지상 관제요격기지와 조기경보기지 등의 레이더 운용부대는 북한 전역에 균등하게 분산되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구비했다고 한다. 북한은 평양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지역에는 사거리 13km의 SA-3을, 휴전선 일대와 해안지역에는 SA-2(사거리 47km)와 SA-5(사거리 260km) 지대공미사일을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 해군의 경우 첨단무기체계를 구비한 우리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 신형 어뢰로 무장한 잠수정<sup>4</sup> 및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공격전

---

4 최근에는 2기의 어뢰가 장착된 반잠수정이 우리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된 바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해상 비대칭전력의 위협성을 더해주고 있다.



---

술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로동신문(5.12)에서 핵융합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협을 더 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열핵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역량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서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사상교육과 반미 대결 선전, 대남 적화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을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하며 충성을 강조하는 충성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군내 사조직과 결사체를 색출하기 위해 군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sup>5</sup>

2011년에도 북한은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각종 공세적인 군사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여전히 서해 해상을 군사적 긴장 야기를 위한 최적지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사훈련 명분으로 해안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강화하여 서해 해상을 분쟁지역으로 고착시켜 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남한의 대북심리전 재개 역제를 빌미로 이와 관련된 시설(전광판, 스피커 등)을 직접 공격하는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

5 인민군대 출신 탈북자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 10월 20일 군부 내의 당, 청년동맹 조직들에 중앙당 지시문이 하달되고 25일부터 총 정치국 지도검열성원들이 파견되어 군부대들에서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11.3)하였다.

---

대의협상력 제고와 군사적 위협능력을 높이기 위해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군사활동을 후계자 김정은의 치적으로 부각하면서 북한의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매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을 1차적으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역량에서 찾고 있는 만큼 김정은의 군사활동을 더욱 부각하는 선동 작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 정영태 · 북한연구센터 소장

---

## 2. 대외관계

### 가. 미·북관계

2010년 미·북관계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공격으로 긴장이 지속된 한 해였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체제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북한은 2009년 12월 보스워즈 특별대표의 방북의 모멘텀을 살려 2010년 미·북 고위급 정치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1월 11일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선비핵화 입장을 고수하였다. 2월 4일 커트 캠벨 미국무부 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정상회담 보다 6자회담이 재개되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포격은 미·북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미국 백악관은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하였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천안함 폭침은 “용서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7.8)에 대해 북한은 ‘외교적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등 평화공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힐러리 국무장관은 의장성명을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하였다. 7월 15일 커트 캠벨 미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비핵화를 수용하면 대화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

원치 않는다”고 북한을 압박하였다.

북한은 이후 대미 유화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8월에는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곰즈씨를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이는 조속히 제재국면을 벗어나고, 6자회담의 대가로 식량 등 시급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은 6자회담을 성급히 재개하기 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의 남북경협중단 조치와 보조를 맞추어 8월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추가제재조치는 이미 시행중인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대량살상무기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3382호를 포괄하여 강화시키는 방식이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총망라하여 제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재효력을 과시하면서도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매우 전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미국의 의도는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이는 한·미간의 일치된 인식과 정책공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하여 북한은 “핵억제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히

---

반발하였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후 남북경협이 중단과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로 경제난이 악화되고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9월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대승호를 송환하고, 수해물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미·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천안함 사고는 외면했고 지원과 경협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워싱턴에 오기 전에 서울을 거치라”고 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압박하였다.

돌파구 마련시도가 벽에 막히자 북한은 11월 9일 방북한 미국의 핵 전문가 해커 박사일행에게 원심 분리기 수백기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했다. 북한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미국이 북한의 원심분리기에 놀라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고위인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미·북 양자회담에 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달리 미국은 이를 11월 20일자 뉴욕 타임즈에 공개한 후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보스워즈 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을 긴급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였다. 북한의 의도가 무산된 것이다.

연평도 포격은 뉴욕 타임즈 보도 3일후 발발한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흥기를 보여주면서까지 계속되는 구걸이 통하지 않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행패를 부린 셈이다.

---

북한의 포격에 대해 미국은 긴급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중국측이 제안한 6자회담 개최와 관련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 훈련이 서해에서 실시되어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과시하였다.

2011년 미·북관계는 북한의 평화체제 공세와 미국의 선비핵화 요구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핵실험, 국지전, 테러와 같은 긴장조성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며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선거철을 앞두고 국내경제이슈에 집중하게 되면서 가급적 한반도의 긴장을 억제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북한의 도발이 없다면 하반기 들어서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문제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북회담이 반확산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병행하는 입장에 경제 제재를 지속하면서 위기관리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진욱 ·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 나. 북·중관계

2010년의 북·중관계는 천안함 사건(3.26)을 계기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해로 평가된다. 특히, 5월과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을 통해 양국은 ‘전통 우호관계의 확대’, ‘대를 이은 발전’ 등을 강조하며 경제 및 정치외교를 넘어 안보 분야에까지 긴밀한 협력을 확

---

대하였다.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통한 북한체제의 안정유지와 천안함 사건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공동대응이 전략적으로 수렴된 결과로 평가된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중국은 2010년에도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2.6~9)을 통한 설득을 지속했다. 북한도 김계관 외무성 부상(2.9~13) 및 김영일 내각 총리의 잇단 방중(2.24)으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하자 대중관계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던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5.3~7)을 통해 중국의 정치·외교적 지원을 모색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층 교류지속, 전략적 소통강화, 경제무역협력 심화, 인문교류 확대, 국제·지역협력 강화’ 등 5개항에 합의하는 등 북·중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또한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희망’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면조성에도 주력하는 한편,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5.20) 이후에도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자 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7.9)을 중재한 후, 천안함 국면 전환 및 출구전략으로서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해 북한과 협력을 강화했다. 북한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는 의장성명 채택을 외교적 승리라고 자평(7.10)

---

하였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RF에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국 간 소통 유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이 ‘선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 재개’를 고수하며, 7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하며 중국과 북한의 국면전환 시도를 견제하자, 중국과 북한은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은 김정일 방중(8.26~30) 시 양국의 전통 우호관계가 대를 이어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였고,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9.28) 종료 후 최태복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방중(9.30~10.2)한데 이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10.10) 차 방북(10.9~11)한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일 위원장과 신 지도부를 초청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서신을 전달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의 후계체제를 지지·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전통 우호관계의 복원을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협력도 지속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8.16~18)한데 이어, 중국을 방문(10.12~16)한 김계관 외무상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건설적 역할에도 합의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도 증대시켰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17기 5중전회(10.15~18)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은 한국전



---

참전 60주년(10.25) 기념사에서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를 강조했다며, 귀보숭(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방북(10.23~26)해, 북한의 이영호 총참모장과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북·중 전통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북·중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반영되어 경제교류와 협력이 증대되었다. 2010년 10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은 약 17억 8천만 달러, 수입은 약 9억 7백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7%와 81% 증가한 수치다. 양국 간 무역의 증대와 함께 경험도 활발히 모색되었는데, 특히 2009년 7월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과 8월 지린성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의 국무원 비준으로 북·중 간 단둥-신의주, 훈춘-투먼-나선 지역 연계개발 협력이 활발히 모색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나선지역 1호 부두의 사용권을 획득했고, 2월에는 ‘압록강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8월 장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양국의 경제협력 원칙에서 ‘정부인도’를 ‘정부주도’로 바꾸어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정부차원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한 지지에서 5월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경험 소개를 피력했고, 8월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발전은 자력갱생에 의지해야 하지만, 대외협력과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한 점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강화된 것임을 상징한다. 이에 호응 북한도 최영림 내각 총리 일행이 중국 동북지방을 시찰(11.1~8)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북한과 포괄적인 협

---

력을 강화했다. 북한 역시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통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1년에도 이러한 양국의 협력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은 북한의 붕괴 방지와 안정 유지라는 중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고, 북한도 3대 세습의 연착륙을 위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구도가 지속될 경우, 북·중 정치관계는 더욱 밀착될 것이고 군사관계도 인사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011년 양국 관계의 발전이 전격적인 혈맹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에는 지정학적 안보가치와 북한 카드의 유용성 이외에도 북한체제와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로 인한 불안정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려는 의도도 내재해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평도 포격(11.23)과 같은 북한의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에도 북·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이완될지언정 근본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2011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의 방미 결과 중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안정관리에 합의를 볼 경우, 북·중관계의 긴밀화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추세가 다소 완화될 소지는 있다. 이처럼, 2011년에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미간 협력 및 갈등 구도가 북·중관계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크며, 중·미간 협력보다 갈등구도가 우세할 전망이어서 북·중관계도 포괄적 협력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 전병곤 ·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 다. 북·일관계

하토야마 연립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토야마 연립정부의 대북정책은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대화과 압박’을 병행하였고,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북·일간의 관계 진전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에 접어들어 북한이 대남 강·온전락을 구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6자회담의 복귀 가능성 또한 불투명화함에 따라, 하토야마 연립정부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 관계 개선을 지향하여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즉, 하토야마 연립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및 독자적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의 발발과 더불어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5.20)’가 발표되면서,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은 즉각적인 대북 경고와 더불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대북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즉, 하토야마 총리는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5.20)한 뒤, 담화를 통하여 북한의 행위에 대해 “용서하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제법의 위반이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하였고,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하토야마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5.24)’ 발표 직후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안전보장회의(5.24)를 열어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아래

---

향후 한국의 대응에 응하여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가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 제주 정상회담(5.29)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판 결의 채택 등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한·일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제3회 한·중·일 정상회담(5.29~30)에서는 한·중·일 3국 공조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애매모호한 중국의 설득을 위해 한국과 함께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이후, 북·일관계는 일본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의 시행에 의해 상당히 냉각되어 갔다. 천안함 사건이후, 대북 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제3국을 통한 대북 수출이 강력하게 단속되기 시작했고, 아소정권에서 폐기된 『화물검사특별조치법(5.28)』의 성립과 더불어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핵무기 및 미사일에 관련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를 받게 되었다. 또, ‘대북 송금 및 현금 지참액 제한(5.28)’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서 북한으로 가는 자금 이동이 감시·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일관계는 하토야마 내각을 이은 간 나오토 내각에서도 계속되었다.

하토야마 총리 및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갈등, 사민당의 연립정권 이탈 등으로 인해 하토야마 내각의 국민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마침내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과 더불어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동년 6월 4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동년 6월 8일 간 내각이 출범하였다.

간 내각은 7월의 참의원 선거의 승리가 최우선 정치과제이었기 때문

---

에 하토야마 내각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지지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간 내각은 새로운 대외정책의 제시보다는 미·일의 갈등의 해소와 미·일동맹의 복원, 한·일관계의 신뢰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국내정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즉, 간 내각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였고,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특히, 간 내각의 대북정책은 간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한 정권에 대해 예전부터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토야마 내각의 대북 제재 노선을 계승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로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간 나오토 총리에 매우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 전후, 일본에 유화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간 나오토 총리가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6.11)’에서 ‘납치문제’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간 내각의 출범이후에도, 냉각된 북·일관계는 지속되었다. 즉, 간 내각은 천안함 사건의 영향으로 한·미·일 공조와 ‘대북 억제력의 강화’에 역점을 둔 대북정책을 전개하였고,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도 한·미와 같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대북정책은 제2기 간 내각에서도 전개되었다.

참의원 선거(7.11)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여 과반수의 확보에 실패하였지만, 간 나오토 총리가 당 대표 경선(9.14)에서 당내 실세 오자와

---

이치로 전 간사장을 누르고 당선되었고, 제2기 간 내각에서 외무장관에 등용된 마에하라 세이지가 미·일동맹의 중시파이고, 전략적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지한파로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처럼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11.23) 직후, 간 나오토 총리는 총리 관저에 북한의 포격 사건에 관한 정보연락실, 북한포격사건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정보연락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간 내각은 11월 23일 저녁에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체제아래 중국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였고,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일본 참의원은 연평도의 민간인까지 무차별 폭격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비난한 ‘대북 비난 결의안(11.26)’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약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미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2011년도의 북·일관계도 한·미·일 공조체제 및 남북관계, 미·북관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냉각상태가 다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 나오토 총리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장관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도에 대한 신중한 평가, 센카쿠 열도와 중·일 갈등의 증폭에 따른 미·일 동맹의 강화 등을 고려해 볼 때, 간 내각의 대북정책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취하면서 전개될 것이고, 따라서 북·일관계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 배정호 ·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

## 라. 북·러관계

북·러 양국은 기존의 선린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러시아는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달리 명백히 북한을 비난하였다.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러시아가 탈북 루트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면에서,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 12월 초순부터 연해주 주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배너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내 나라’라는 이름의 북한 배너는 김정일의 활동소식과 더불어 정치, 관광, 무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어로 볼 수 있는 남한의 배너광고가 게재되자 북한도 외국어 서비스를 보강하였다. 『조·러 친선선린 협조 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수히닌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청진 소재 러시아 총영사관에서 베포 연회(2.8)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궁석용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등이 참석하였다. 북한의 중앙신문들은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입장”이라고 강조(2.9)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국경을 맞댄 극동 지방에 북한 난민이 대량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5.29)하였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극동지역센터 당국자는 남북한 대립이 심각해짐에 따라 북한 난민이 대거 러시아로 몰려올 때에 대비해 난민수용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시절 군 주둔지로 사용하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

않는 극동 연안 지방의 거주지역 8곳을 북한 난민수용 시설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정권 창건일(9.9)을 맞아 김정일에게 축전을 보내고 북·러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안보·군사 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2.19)에서 러시아 측은 6자회담과 비핵화 프로세스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궁석용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2.27)하여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러시아 측에 설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러시아가 포함된 G8 외무장관들은 캐나다에서 개최된 세계안보 관련 회의(3.29~30)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공동 촉구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대한 대통령 명령서에 서명(3.30)함으로써 그 이행에 들어갔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4.21), 이튿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19 공동성명’을 기초로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자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북한 외무성 발표(10.16)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10.20).

천안함 사건(3.26)과 관련, 한반도 안정을 중시하는 러시아는 사태 악화를 우려하여 남북한의 입장만을 소개하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6.3)하였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

들이 방한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사(5.31~6.7)를 벌이는 한편, 러시아 정부는 캐나다 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비난하는 공동성명(6.26)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고립을 우려하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써 의장성명이 채택(7.9)되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들도 자체 조사 이후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천안함 사건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만족하고 사안을 종결해야 할 것”이며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구전략”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10.6).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11.23)과 관련, 같은 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남한의 섬(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면에서, 북한은 나진항 3호 부두를 5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나진항이 북·중 간에 국제물류기지로 개발되면 사할린과 시베리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나진항으로 보내 주변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장, 도로, 도량 등의 건설에 북한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주의회 의장은 “APEC 회의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에 6천명의 노동비자를 내줬다”고 밝혔다(3.11). 또한 요미우리신문 보도(6.19)에 의하면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서부지역 일대 건설 현장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모스크바주에 전입한 북한인은 2008년 516명에서 2009년 878명으로 늘었다. 러시아내 북한 근로자는 2004년 14,700명에서 2007년 32,600명

---

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 북·러 간에는 임시근로자 입국 수속의 원  
활화와 취업자 권리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발효(2009.12)되  
어 북한의 근로자 파견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북한 근로자  
들의 임금은 통상 임금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탈북자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 상기와 같이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탈북자들이 러시아를 주된 탈북루트의 하나로 활용하  
고 있다. 아무르주에서 북한 노동자 12명이 한국으로 왔고(2009.9), 러  
시아로 밀입국했다 붙잡힌 북한 관리(남, 40)가 러시아 정부와 유엔난  
민고등판무관(UHCHR) 사무소에 러시아로의 망명을 요청(2월)하였  
다. 북한 별목공 2명이 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왔다가(3.9)  
9월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하였다. 러시아 보안 당국은 탈북자 처  
리가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도 북·러 양국은 전통적인 선린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김정은 후계정  
권을 즉각 용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 양국은 관련국들에게 6자회  
담 재개를 계속 촉구할 것이며,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탈북자 증가와  
그 처리 문제는 양국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여인곤 ·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 3. 대남동향

2010년 북한의 대남동향은 유화와 강경이라는 전통의 대남 이중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구사된 특징이 있다. ‘대승호’를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며 각종 회담을 먼저 제안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인 반면, 전반기의 천안함 폭침과 하반기의 연평도 포격 등 정전협정 이후 전례없는 무력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웠다. 우리 이외로부터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남북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로동신문, 1.8)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금강산 및 개성지구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금강산, 1.26~27)을 제의(조선중앙통신, 1.14)한 뒤,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개성공업지구, 1.19~21),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개성, 2.1),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개성, 3.2)에 응하는 등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 재개사업은 단순히 관광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문제”라며 우리측에 관광재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평양방송, 2.24)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천안함 폭침을 도발했고 우리 당국이 5·24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8개항의 조치를 선언(조선중앙통신, 5.25)했다. 8개항은 ①남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②현 정부 임기기간 중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 중단 ③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의 사업 중지 ④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⑤개성공업지구 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철폐와 남측 관계자 전원 추방

---

⑥‘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 개시 ⑦남 선박·항공기들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⑧전시법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처리였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평양방송, 5.14)했고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8.15)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망발’로 비난(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8.23~29)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일단락되어가자 유화공세를 전환했다. 수재물자 지원을 요청(9.4)했고 나포(8.8)한 ‘대승호’를 송환하기로 결정(중앙통신, 9.6)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제의(9.10)하여 실행(10.30~11.5)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 및 노력’의 진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도록 하여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남북실무회담 조속 개최를 여러 차례 주장(로동신문, 10.18; 중앙통신, 10.27; 중앙방송, 10.28; 조선중앙통신, 11.11)한 데서 잘 드러난다. 특히 북한은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11.18)을 통해 ‘남북 적십자회담(11.25)시 관광재개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거듭 제의했다.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계속 우리와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보복을 천명함으로써 지배층의 결속을 다져나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연초에 우리측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행동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남 당국의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며 “청와대를 포함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 1.15)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는 ‘연합성명(2.8)’을 통해 남 당국의 “반북 체제전복 시도가 위협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조선중앙통신·중앙방송, 2.8)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심리전 재개가 결정되자 체제유지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다. 우리측의 심리전용 확성기 설치 등과 관련, <총참모부 중대포고>를 통해 “반북심리전 수단 등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청산해 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조선신보, 6.12)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자 북한은 매일 천안함 사건이 ‘한·미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협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예를 들면 7월 2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은 이례적으로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는 높은 수위의 형식을 빌려 ‘보복성전’ 등 강경한 입장을 천명(조선중앙통신, 7.24)했다. 한·미 합동 군사연습, 한·미 연합훈련(9.5~9)에 대해서도 위협을 계속(로동신문·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8.31~9.4)했고, 『조평통』 서기국 보도(10.15)를 통해, PSI 훈련 실시(10.13~14)를 ‘전면대결 선포’로 비난(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10.15)했다. 또한 로동신문(10.19)을 통해 ‘한·미 연합공중전 훈련’ 실시(10.15~22)를 “북침선제타격능력 완성을 위한 전쟁불장난”으로 비난하며 “무분별한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 뒤, 마침내 연평도 포격을 감행(11.23)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11.23)와 조선중앙통신은 연평도 포격이

---

‘자위조치’라고 강변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인정과 계속적인 군사적 타격을 선언(11.23~27)했다.

9월말 김정은이 3대 세습후계자로 공개된 만큼 앞으로 북한의 최대 과제는 후계체제의 성공적 구축이다. 앞으로 후계체제가 갖추어져 가는 상당기간 동안 북한은 대내정치적 이유로 대외 강경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취약하고, 김정은의 입지도 내부적으로 탄탄하지 못하다. 따라서 매우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여 외부가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긴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치안정에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업적을 쌓기 어려운 김정은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면은 군사적 저돌성이므로 돌출적인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도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북한이 핵보유를 계속 고집할 경우 내부 경제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있는 북한으로서는 내년에도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원 요구를 수용하도록 간헐적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위협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 이교덕 ·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Ⅲ

## 남북한관계 ...







---

## 1. 남북대화

2010년 한 해는 북한의 대남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국면에 빠졌다. 3월의 천안함 사태에 이어 11월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 문제가 국제문제화 되면서 남북 간 민족 내부의 대화 국면은 얼어붙었다. 특히 연평도 피격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 동맹과 국방력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졌다.

연초 남북관계는 연초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출발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까지 나타났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남북관계는 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즉, △개성공단 실무회담,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 그리고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

우선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2010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남북 합동으로 실시했던 중국·베트남 해외공단 시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방향과 공동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문제 등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평가회의인 만큼,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1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2010년 3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

---

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은 전체회의와 분야별 실무접촉(통행·통관, 통신·군통신 분야)을 진행하고 3통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였다. 회담 결과는 남북은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며,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실무접촉 합의서(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개성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3대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응해 오지 않아 남북 양측은 차기 회담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후 3월 26일의 천안함 사태의 충격과 경악 속에 ‘5·24 대북조치’로 남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년 후반기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이산가족 ‘1차 상봉(10.30~11.1)’은 금강산에서 북측 상봉단 110명이 우리쪽 가족 436명을 만나 60년간 가슴속에 쌓아둔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2차 상봉(11.3~11.5)’은 남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95명이 북측 가족 205명과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후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아갔다.

---

2011년 남북관계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2010년 연말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발 긴장과 위기 국면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중국이 남북한의 ‘절제와 냉정’을 요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밀착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 지난 11월 미국측에 우리농 농축 현장을 초청 관람시킴으로 북핵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2011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도에 북핵 문제 해결 성과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핵 폐기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러나 비공식적·비공개적 차원에서 ‘북핵 현실’의 인정을 전제로 ‘대화과 협상’ 모드로 선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정상회담은 그러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다시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살아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2011년 전반기는 미·중관계의 향방, 즉 북핵 문제의 협상 국면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 조 민 ·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2.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 가. 경제분야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북한의 잇단 강경조치와 대남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2009년에 통신차단 조치(3월), 장거리로켓 발사(4.5), 제2차 핵실험(5.25)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였다. 2010년에 들어와서 북한의 도발 수위는 한층 강화되었다. 3~4월에는 금강산지구 우리측 자산을 동결·몰수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3.26)과 연평도 포격사건(11.23)을 일으키는 등 직접 우리측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형태로 도발의 양상이 바뀌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5.24 대북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는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간 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금지, 방북 불허 및 접촉 제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되었다. '5.24 조치' 발표 이후 정부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반출입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남북간 교류 중단에 따른 남북교역 및 경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런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분위기는 냉각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남북왕래 인원은 12만 862명으로 2008년의 18만 6,775명에 비해 35.3% 감소하였다. 2010년 10월말까지 남북왕래인원은 11만

5,085명으로 나타나 올해 남북왕래 인원은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남북교역액은 2009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2010년 10월말까지 남북교역액은 16억 3,019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의 12억 7,553만 달러 대비 약 27.8% 증가하였다.

<표 III-1> 2009년도 및 2010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일반 교역	위탁 가공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기타 경제 협력	대북 지원	사회 문화 협력		
2009	교역액	256,141	409,714	940,552	8,711	26,997	36,379	588	1,678,494
	구성비	15.3	24.4	56.0	0.5	1.6	2.2	0.0	100.0
2009 1~10	교역액	201,872	335,591	690,413	8,327	22,345	16,751	234	1,275,533
	구성비	15.8	26.3	54.1	0.7	1.8	1.3	0.0	100.0
2010 1~10	교역액	116,956	285,858	1,196,793	2,264	8,223	19,404	700	1,630,197
	구성비	7.2	17.5	73.4	0.1	0.5	1.2	0.0	100.0

남북교역이 2010년에 들어와서 신장한 주된 원인은 개성공단 교역액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말까지 개성공단 교역액

---

은 11억 9,679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73.3% 늘어났다.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줄어든 반면 개성공단 교역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북교역 총액은 증가한 것이다. 이런 개성공단 교역액의 신장을 반영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중은 2010년(1~10월) 73.4%로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성공단의 비중은 54.1%에 머물러 있었다.

2010년 1~10월 남북교역은 상업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상업적 거래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교역은 거의 대부분 상업적 거래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상업적 거래에서 개성공단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위탁가공교역(17.5%), 일반교역(7.2%)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24 조치’에 따라 일반교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0년(1~10월)에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25건(이중 민간경협 19건, 개성공단 6건)을 승인하였다. 2009년 정부는 총 11건의 경제협력사업(민간경협 1건, 개성공단 10건)을 승인하였다. 2009년에 비해 경제협력사업 승인실적이 늘어난 것은 2010년 9월 29일부로 금강산관광지구 내에 식당, 판매업, 비치호텔 등 민간경협 19건을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는 2010년 10월 말 현재 121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9월 말 현재 44,524명의 북측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2010년 1~9월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2억 3,972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억7,673만 달러 대비 35.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 개시 후 5년 9개월(2005.1~2010.9)간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10억 2,105만 달

---

리를 기록하였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남북한은 중국의 청도·소주·심천공단과 베트남의 옌퐁공단을 합동으로 시찰(2009.12.12~22)하였다. 이어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를 개최(2010.1.19~20)하고 향후 개성공단 발전방향과 해결 과제 도출에 대해 토의하였다. ‘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실무회담(2010.2.1)’에서 우리측은 3통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이 개최(3.2)되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5.24 대북조치’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평일 기준 1천여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7월 중순 정부는 개성공단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 체류인원을 600명 안팎으로 확대했다가 9월 중순에는 다시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8.5)하였다. 합의 내용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현재 57.881달러에서 60.775달러로 조정해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1년 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를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지구 부동산 문제, 관광재개문제와 관련하여 당국간 실무회담을 10월 15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10.2)한데 대해 통일부는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관광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관련 입장을 추후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10.12)하였다. 북한은 또 다시 명승지종합개발지

---

도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11월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물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11.17)하였다. 정부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만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경협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1년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0년의 경우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다면 남북교역의 모든 유형들은 위축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2011년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공교역과 일반교역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없다면 감소될 것이고, 대북지원 또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남북경협의 관건은 개성공단사업의 운영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현 수준에서 가동된다 하더라도 남북교역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수영 ·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침몰 사건과 연평도포격 등 한반도 긴장의 고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전반에 부정



---

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중단을 포함한 ‘5.24조치’의 실시는 2010년 상반기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2009년 크게 감소한 사회문화교류의 경향성은 2010년에도 이어졌으나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교류협력은 지속되었다.

남북사회문화교류는 2010년 10월말 현재 교육학술 8건(95명), 체육 1건(3명), 종교 15건(77명), 언론출판 3건(7명), 시민사회 5건(22명) 등 총 32건(204명)으로 과거에 비해 위축된 경향을 나타냈다.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협력사업도 위축된 경향을 보여 2010년 10월말 현재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주관하는 ‘2010년 개성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 1건(3.17)을 제외하고는 승인된 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은 참여정부시기에 총 121건이 승인되었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008년 3건, 2009년 0건, 그리고 2010년 1건 등 감소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학술교류의 경우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 출간예정인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까지 20여 차례의 남북공동편찬 회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 10월에는 편찬사업비로 2억 9천 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바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은 2010년에도 계속되어 3월 23일부터 5월 18일 까지 현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종교분야의 경우 대규모 행사위주에서 점차 실무차원의 협의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협의보다는 기존사업의 점검과 향후 교류의 방향성등에 관한 의견교환 등이 주를 이루었다. 기독교계는 개성, 평양과 중국 등지에서

---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갔다. 불교계는 2010년 중장기적인 남북불교 교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부처님오신날에는 북한에 향과 초등 예불물품을 지원하였다. 천태종은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과 2010년 11월 10일 개성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 909주기 합동 다례재를 봉행했다. 영통사는 16세기 화재로 소실됐으나 천태종이 복측과 공동으로 2002년부터 3년간 복원했으며, 2007년 대각국사 열반 추모 합동다례재를 처음 봉행한 바 있다.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2010년이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해외공동행사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개별적으로 개최되었다. 『6.15 남측위』는 2010년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야외행사를 가졌으며, 6월 15일에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안중근기념사업회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북공공기념행사를 중국 여순에서 개최하였다.

지자체교류 역시 남북관계 경색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위축되었다. 2010년 2월 17일 제주도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감귤 200톤을 북한으로 보냈다. 1999년 처음 시작된 제주도의 감귤보내기운동은 지자체사업으로는 12년째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방북을 통한 인적교류 등 대부분의 지자체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해 구성된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는 2010년 상반기 개최되어 2009년에 이어 분기별 회의를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전반적인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문제의 해소와 북한이 ‘갑’이 되는 남북관계의 수정을 시도함으로써

---

과거와 다른 시도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대남강경책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발생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천안함피격침몰과 연평도포격 등 북한의 직접적 무력도발은 북핵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바, 당분간 남북교류 확대의 계기는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1년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추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상징적 대형 사업 등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한범 ·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다. 북한인권 및 인도주의 분야

### (1) 북한인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이 지속되었다. 2009년 12월에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또한 9월말에는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후계구도 안정화 및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내부 통제와 국경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생존권이 침해되었다. 북한이 내부통제와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은 2009년 북한형법 개정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은 2009년 3월 헌법 개정에서 이어 2009년 미상(未詳) 시기에 형법을 개정하였는데 상당 수 조문이 개정되었다. 2010년 전체 조문이 입수되지 않고 252개 조문이 국내에 입수

되었는데 그 중 50%에 달하는 126개 조문이 개정되었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2009년 헌법 개정시 통치이념으로 명시한 선군사상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외부, 특히 남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후계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탈북자의 처벌규정인 비법국경출입죄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로동당규약을 개정하였다. 아직 전문(全文)이 공개되지 않아 로동당규약 전체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는 위상이 대폭 강화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의 군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후계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통해 군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경제계획법과 평양시관리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법령들에는 계획경제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기조가 두드러지며, 7월 8일 제정한 노동보호법과 상업회의소법에는 감독·통제를 중시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되었다.

한국에서는 2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18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고, 3월 2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 지도자에 대한 형사재판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2010년 12월 6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연평도 포격 사건 및

---

천안함 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가운데 하나인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였다.

2011에도 북한은 후계구도를 안정화하고 2012년 목표로 내세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제 강화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명권, 신체적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탈북자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공개처형, 동지심판, 국가안전보위부에서의 정치범 판결 등 재판소에서의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소위 유사재판제도에 의한 처벌이 많은 문제가 되어 왔는데 북한 당국의 단속 강화와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반발로 유사재판제도에 의한 처벌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중국도 정권 이양기에 있는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단시일 내에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자체의 식량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도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 유엔의 결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움직임 등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과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 이규창 ·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2) 이산가족문제

2010년 남북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의 남북 적십자회담과 한 차례의 상봉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회담(10.26~27)은 북측의 쌀·비료 지원 요구로 인해 남북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으며, 11월 25일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쌀(50만 톤)·비료(30만 톤) 지원을 상봉 정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설, 추석 등 명절을 기본으로 1년에 3·4차례 남북 각각 100명 규모로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사업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대규모의 쌀·비료 지원은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대응하였다. 우리측은 매달 남북 각각 100가족 규모의 상봉 정례화, 매달 남북 각각 50가족씩 기상봉가족의 재상봉 행사,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이를 위해 매달 남북 각각 5,000명 규모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8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 사업, 남북자·국군포로문제의 전면적 생사확인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1월 25일로 예정된 후속회담은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남북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성사된 상봉 행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제의로 이루어졌다. 상봉 행사는 1차(10.30~11.1), 2차(11.3~5)로 나뉘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단체상봉)와 금강산 호텔(개별상봉)에서 진행되었으며 1차에서는 북측 가족 97명

과 남측 가족 436명이, 2차에서는 남측 가족 94명과 동반가족 43명이 북측 가족 203명과 만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북측 이산가족 가운데 국군 출신 4명이 포함된 사실이다. 이들은 지난 해 상봉행사에서 확인된 1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 중 행방불명되어 1957년 일괄적으로 전사자로 처리된 사람들이며 우리 정부가 정리한 500여 명의 국군포로 명단에도 없다. 북한당국이 이번 상봉행사에 국군 출신을 4명 포함시킨 것은 우리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엿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인도적 지원의 규모 확대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내지 입장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번 상봉사업도 북측의 배려 내지 시혜적인 행사임을 과시하는 한편 상봉의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북측은 적십자 실무접촉 및 본회담에서 우리측이 ‘상봉 정례화’라고 말한 데 대해 ‘상봉 정상화’라고 표현하였는 바, 이는 우리측이 제의하는 정기(정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명절 등 특정일을 계기로 하여 소규모의 상봉을 실시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예전과 다름없는 북한당국의 행태와 천안함 사태에 이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보다 더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망은 밝지 않다.

- 임순희 ·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3) 대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문제

2010년 대북지원은 2009년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였다. 2008년, 2009년에 중단되었던 당국차원의 지원이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일부 이루어졌으며, 적십자를 통해 이루어진 수해지원도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민간차원에서도 지원재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천안암 폭침을 계기로 방북이 제한되면서 2009년의 377억(59개 단체)에서 154억(10월말 현재, 40개 단체)으로 감소하였다.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도 2009년 77억에서 14억(10월말 현재)으로 집계되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행위로 인해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단기간 내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며, 민간차원의 지원도 매우 소규모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11월 말 현재 남성 570명, 여성 1,622명(77%) 총 2,192명으로 지난 해 11월 말 기준 2,656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 전체 입국자의 규모는 2009년 2,927명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도 2009년과 유사하게 태국 등 동남아 국가 경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 후 1~2개월 이내에 국내 입국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는 탈북자 출신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고 있다. 2009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10년에도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던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2월 화폐개혁 이후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경비가 강화되어 탈북비용이 크게



---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 및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도 강화되었다. 유럽거주 탈북자들이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 실현을 목표로 ‘재유럽 조선인총연합회’를 출범시켰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황장엽 암살조’가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 입국하였다가 검거되면서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조사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조사기간을 최장 6개월로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되었던 하나센터가 2010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상담사제도를 본격 도입하였다. 또한 11월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되어 민간차원의 정착지원제도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1년에도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출산 자녀를 동반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현재의 국경단속이 유지되는 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 및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중개인들의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지속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방안이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북한민주화 관련 탈북자단체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3.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간 긴장 고조

천안함 폭침, 우리늄 농축,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이 2010년에 들어 발생하였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6·25전쟁 이래 북한은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과 테러를 감행해 왔다. 가까이는 1, 2차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었고, 멀리는 미얀마 테러나 KAL기 폭파사건 등과 같은 테러가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테러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만드는 자가발전적인 요인이 북한의 이러한 과거 행적들이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과거 행적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사건중의 하나일 뿐이다.

북한이 무슨 목적으로 금년에 일련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목적 내지는 도발이유에 대한 해석들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후 남북경협의 중단과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로 경제난이 악화되고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7.8) 직후 6자회담의 복귀와 평화체제 논의를 언급함으로써 천안함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돌파구 마련시도가 벽에 막히자 11월 9일 방북한 미국의 핵전문가 해커 박사일행에게 원심 분리기 수백기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외면하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 행패를 부렸다고 해석을 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불만이 대남 군사적 도발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천안함 공격이후 궁지에 몰린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통

---

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형상 북·중관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장 시급한 식량이나 현금을 얻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관심이 있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선도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와 북한의 개방이 중요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자신들을 계속 무시하면 중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대남 군사적 도발을 시도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한내 전쟁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우리가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북지원을 안할 경우 우리도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신호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선전을 강화하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다.<sup>6</sup> 이러한 시각은 선거결과 여당이 패하자 북한의 대남 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던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넷째, 시각은 북한의 내부사정 극복을 군사도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고 대대적인 권력재편을 단행하였으나 계속되는 식량난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며 엘리트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어리고 경험없는 후계자의 부족한 정통성을 만회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업적쌓기’가 절실할 수 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후 북한은 “청년대장(김정은)이

---

<sup>6</sup> 5월 29일 조국전선이 발표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

영도하는 혁명적 무장력이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는 선전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발의 목적이나 이유가 어찌됐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특수부대를 포함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핵-화학-생물무기 등과 같은 비대칭전력은 그 속성상 공격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수월치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적어도 비대칭전력이라는 면에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단언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 어쩌면 북한이 지니고 있는 비대칭전력은 남한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일반적인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열세이지만, 비대칭전력 면에서 남한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위협은 남한의 행동반경을 충분히 제한하고도 남는다.<sup>7</sup>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는 대남 협박 언사중의 하나인 서울 혹은 남한의 불바다 위협은 더욱 남한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 2010년 5월 19일자 CNN 인터넷 판에서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지라도 남한의 보복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이유는 비록 남한과 미국이 재래식 무기전력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보복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위협성이 너

---

7 남한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보다 우위라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기술적인 면이나 성능 면에서는 남한이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재래식 무기의 숫자가 의미하는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절대 남한이 우세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무 크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등 뒤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응징을 남한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이후 가진 대담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국방의 기본개념을 수동적 방어 전략에서 능동적 억제전략으로 바뀌야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보고에서는 능동적 억제전략의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즉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하게 되면 북한의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 능동적 억제전략이라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 나온 정책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격이후 가진 국민담화(11.29)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로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남한으로서는 북한이 도발이라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도발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남한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통해 남북관계에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질서에 순응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남한이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 그 질서가 남한

---

이 보존해야 하는 질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어쩌면 이러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래서 남한의 핵억지 방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빠지지 않고 내어놓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안보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호신수단을 내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강경책과 온건책을 오갔다. 그러나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로부터 지원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의 중단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원치도 않는다.

결국 북한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최상의 선호도는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안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남 도발을 통해 남한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전쟁 공포감을 유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전쟁을 피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믿게 하고 차기 정부도 대북 지원을 거부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게 됨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북한은 테러, 핵실험, 국지도발 등 다양한 수법의 도발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한국의 보복 응징에 대한 우려가 적을 때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2011년에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

---

태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 수단은 또 다른 군사도발일 수 있고 반대로 대화를 갈구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질서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올바른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 능력과 의지다.

- 홍우택 ·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부록: 2010년 주요 사건일지

### 남북정세 일지

- 1.15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옥수수 1만톤 수용 의사 전달
- 1.19 북한 적십자 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신종플루 치료제(50만명분) 분배내역 통보
- 1.19~21 남북 개성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개성)
- 1.25 판문점 연락관 협의 통해 옥수수 1만톤 지원 진행절차 대북통보
- 1.25 북한 백령도 등 NLL 인근 근해 항행금지구역 선포(1.25~3.29)
- 1.26 개성 경협협회사무소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 3통문제의 조속한 해결 논의
- 1.27~29 북한이 선포한 구역(NLL 북쪽 해상) 해안포 사격
- 2.1 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개최(개성), 향후 군사실무회담 통해 3통 문제 협의 후 숙소, 임금문제 등을 당국 간 실무회담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 2.8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 2.17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200톤 북으로 전달
- 3.1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북한이 남북 간 여러 현안과 그랜드 바겐 논의
- 3.2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 분야별 실무접촉 지속 개최 합의
- 3.17 2010년 개성만월대지구 남북 공동발굴조사
- 3.18 북한 아태위 명의 통지문(→통일부, 현대), 3.25부터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실시 통보
- 3.23~5.18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 3.25~31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조사 실시
- 3.26 천안함 사태
- 3.26~28 안중근기념사업회, 중국 여순 남북공공기념행사 개최
- 4.8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남한 당국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등 선포
- 4.9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전통문(→현대 아산), 정부 소유 면회소와 소방서, 관광공사 소유 문화회관 등 5개 동결대상 부동산 소유자·관계자 입회 하에 4.13 조치 실행 통보
- 4.13 북한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시설 동결, 면회소 관리인원 추방
- 4.21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현대아산에 '국방위 정책국이 4.22 금강산 부동산 조사결과 검토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구두 통지
- 4.27~30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동결 및 물수 조치 실행, 최소 인원(16명)

- 의 관리인원 추방 통보
- 5.24 천안함 사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담화, 개성공단과 영유아 지원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적극적 억제원칙 강조
- 5.25 북한 군사실무회담 단장, 남한 해군함정 수십여척이 북한 영해연속 침범(5.14~5.24) 주장, 실제적 군사조치 실행 위협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 선언
- 5.26 북한 적십자 중앙위 명의 전통문,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 중지 및 통신연계 단절 통보
- 6.11 북한 국방위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안보리 회부를 반복 실천행동 진입이라 주장, 무자비한 대응조치 취하겠다고 위협, 검열단 수용 재차 요구
- 6.24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서해상 군사적 도발행위와 심리전 재개를 지속할 경우 강한 대응조치 위협, 검열단 수용 재차 요구
- 7.18 북한 강우량에 따라 저녁 8시 이후 입진강 상류 언제(댐)의 방류 가능성 통보(7.22, 오전 6시부터 방류 예정 통보)
- 8.5 개성공단관리위원회-北 총국 2010년도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 55 인상 합의(57.881달러→60.775달러)
- 8.8 대승호 나포
- 8.9 북한 서해 해안포 발사(백령도, 연평도 인근 해상)
- 8.15 대통령 8.15 경축사,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한반도통일과정 제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 논의 제안
- 8.20 남한 적십자총재 명의 전통문, 북한측 조사중인 대승호와 선원들을 국제법과 관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송환해 줄 것 촉구
- 9.4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쌀 및 복구장비 등 지원 요청
- 9.7 대승호 선원 및 선박 귀환
- 9.24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9.29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식당, 판매업, 비치 호텔 등 민간경협 19건 승인
- 9.30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 10.1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이산가족 상봉행사(10.20~11.5) 진행 합의,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 협의·해결 위해 개성 적십자회담(10.26~10.27) 개최 합의
- 10.2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 적십자실무접촉 협의에 따라 금강산지구 부동산 문제, 관광재개문제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 15일 개성 회담 제의
- 10.12 남한 통일부 명의 통지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행사 일정 고려 금강산관광문제 논의 위한 당국간 회담 관련 입장 추후 통보 의사 전달

10.18	남북항공관제 통신망 복원
10.25	1차 쌀, 컵라면 출항, 단동에서 신의주 전달
10.26~27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쌀·비료 지원 요구로 인해 합의 결렬, 11.25 적십자회담 개최 합의
10.30~11.5	이산가족 상봉행사(1차 : 10.30~11.1, 2차 : 11.3~11.5)
11.23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11.24	남한 적십자 총재 명의 통지문, 남북적십자회담(11.25) 무기 연기 통보
11.29	대북 수해지원 잠정 중단 발표 대통령, 북한 도발 관련 대국민 담화

### 동북아정세 일지

1.10	EU, 북한 장성택·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
1.20	위성락 방미, 한·미 북핵 현안 협의
2.2	한·중·일 '상설사무국' 서울 설치
2.7	로버트 박, 미국 도착, 가족 재회 방북 중국대표단, 노동당 국제부와 회담
2.8	북한 김정일, 왕자루이(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
2.11	방북 유엔 대북특사, 김영남 면담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2.27	북한 김영일, 중국 라오닝 방문
3.2	스타인버그 방중, 미·중관계, 북핵 논의
3.12	북핵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 방한, 한·일 6자 현안 협의
3.16	북한 역류 미국인 여사접근 허용 북한 김영일 총리, 류홍차이 중국대사 접견
3.17~20	한국 재외국민협력위원장 美서 FTA 비준 촉구대회
3.27	북한 김영남, 아프리카 3개국 순방
3.31	중국 군사위 부주석-북한 군사대표단 회담
4.1	오바마, 한국 핵확장억지력 제공 재확인 및 천안함 사고조사 적극협력 의사표명
4.2	국방부 美 NPR에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4.17	북한 주중대사 교체 공식 확인
4.30	후진타오, 남북 정상급 연쇄 회동
5.3	중국 북한에 변경무역 위안화결제 허용
5.9	한·미,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서로 보장
5.14	美 2+2 협의서 북한 문제 논의
5.15	한·중·일 외교장관, 천안함 6자회담 협의

- 5.28 러시아 외무차관, 북한 대사와 천안함 사태 논의
- 5.31 한·중·일 표준협약체 구성
- 6.14 미국, 북한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
- 6.15 유럽지역 탈북자 단체 출범
- 6.17 유럽의회, 4년 만에 대북 결의안 채택
- 6.16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개최
- 6.26 캐나다에서 G8회의 개막, 경제위기·천안함 논의
- 7.8 유럽의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 7.15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 발효
- 7.21 미국,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 제재 부과
- 미국, 추가 대북 금융제재. 한·미 '2+2' 회의
- 7.25 한·미, 동해서 천안함 공격 대응 연합훈련 돌입
- 7.30 북한 박의춘, 미얀마 외무장관과 회담
- 8.1 미국 대북제재팀 방한, 대북금융제재 협의
- 8.3 한·미 대북 금융제재 공조 논의
- 한·미 원자력협정-파이로프로세싱 분리 합의
- 8.26 미국, '북한 여행 경고' 발령
- 8.27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 개최(장춘)
- 8.28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북한 석방 공조 동행 귀환
- 9.1 중국 서해 군사훈련 시작
- 9.9~11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 9.16 한·일, 도쿄 첫 국장급 FTA 협의
- 9.18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방북
- 10.1 한·미, '북한후계-6자회담' 현안 협의
- 10.7 한·미, '김정은 후계' 북한 정세 협의
- 10.8 한·미, 제 42차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 10.11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문제 협의
- 중국, 북한 '새 지도부' 방중 초청
- 중국, 한·미·일 3국과 양자 국방장관회담
- 10.10 북한 김정일, 저우용캉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면담
- 10.13 한국 주도 PSI 훈련, 부산 앞바다 실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심포지엄 개막
- 10.14 한·미 공군, 대규모 공중전 훈련
- 10.23 귀보승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북
- 10.25 한국, PSI 정식 운영멤버 참여 확정
- 10.27 한·미 통상장관, FTA 협의 첫 공식 접촉
- 10.29 싱가포르, 대북 무역제재 강화
-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방한

- 11.9 IAEA 총장, 북핵 6자회담 재개 촉구
- 11.10 미국, 서해 항포교전 방침 재확인
- 11.11 후진타오, 방중 북한 지도자에 남북관계 중요성 강조  
한·미정상, FTA 이견속 양국동맹 재확인
- 11.21 보즈워스, 한·중·일 긴급 방문
- 11.23 한·중, 북한 우라늄 농축문제 의견교환
- 11.26 양제츠, 북한 주중대사 면담, 한반도문제 논의
- 11.27 중국 다이빙귀 전격 방한, 김성한 외교장관과 만찬협의
- 11.28~12.1 한·미 최고수준 연합훈련
- 11.29 한·일 의원 “北 연평도 공격 규탄” 공동성명
- 11.30 안보리 ‘북한 우라늄 농축’ 제재 강화 검토
- 12.1 한·미·러, OSCE 무대서 연평도 도발, 6자회담 협의
- 12.9 중국 다이빙귀 방북, 김정일 면담
- 12.13 북한 박의춘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  
한·미, 확장억제위원회 운용계획 서명
- 12.14 위성락, 방러, ‘연평도.UEP사태’ 논의
- 12.17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서울)  
한·미, 오늘부터 FTA 합의내용 조문화 작업
- 12.18 러시아, 한국 연평도 사격훈련 취소 강력 촉구
- 12.20 안보리, 한반도 긴급회의 합의 도출 무산
- 12.23 한·미, 내년초 미군기지 이전비용 협상 타결
- 12.28 중국, 북한과 연계되는 교통망 대대적 정비 추진
- 12.29 북·중, 내년 라진·황금평 합작개발 시작

## 북한정세 일지

- 1.2 평양 상업망들의 새해 첫 판매활동 보도 및 화폐개혁 성공 선전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해 평양시 군중대회 등 선전선동 활동
- 1.5 김정일,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관하 구분대 시찰
- 1.11 북한, 외무성 성명발표,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회담 개최 공식  
제의
- 1.12 남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북한에 6자회담 조속 복귀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이행 촉구
- 1.12~16 북한, 한국 군사훈련 비난 「국가보안법」 폐지선동, 한국정부 ‘대결정책  
전환’ 압박,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
- 1.13 북한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남북군사실무  
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 발송

- 1.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농장법 등 7개의 새로운 부문법 채택·발표
- 1.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발표, 평화협정 체결 재차 촉구
- 1.25~29 북한, NLL 인근 지역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
- 1.26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개최
- 1.29 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2009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 「150일/100일 전투」 목표 수행정형 총화, 금년도 공동시설 과업 관철 문제 토의
- 1.30 북한, 미국인 추가역류 공식 통보
- 2.5 북한, 불법 입국한 ‘로버트 박’ 석방 결정
- 2.8 北 인민보안성과 안전보위부 연합성명, 남조선 당국이 반공화국체제 전복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 전면적인 강력조치 등 위협
- 2.23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 국토 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
- 3.8 한·미 합동 군사연습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 북한은 최고사령부 보도를 발표, 인민군에 ‘전투동원태세’ 명령
- 3.9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 되는 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 3.10 북한,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제1차 회의
- 3.17 북한, 2월부터 평양과 지방 병원들 광섬유통신케이블로 연결한 「원격 의료서비스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선전 보도
- 3.19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상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광재개에 대한 북한측 입장 상세 설명
- 3.2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 4.9 평양 소집” 발표
- 3.29~4.5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프리카 3개국(가봉·감비아·세네갈) 순방, 각종 친선협정 체결
- 4.8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발표,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한 당국 자산 동결’ 등 4개항의 행동조치 일방 선포
- 4.9 북한, 4.9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개최, 2009년 예산집행 결산과 2010년도 예산 등 4개 안건 논의
- 4.12 남한 장성군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으로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 지적 및 유감표명, 향후 발생문제에 대해 대북경고
- 4.21 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총화, 2/4분기 실행대책 논의
- 북한, 외무성 비망록 발표, 핵보유 정당성 주장,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의 국제적 핵 비확산과 핵 군축 동참 주장
- 4.23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당국 자산 몰수 및 민간 부동산 동결 조치’ 발표
- 4.23~25 군 창건 7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개최 등 각종 기념행사

- 4.27 북한, ‘배 감시조정센터’ 신설
- 4.29 북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무연탄가스화 비료생산공정 완성 및 조업식
- 5.3~5.7 김정일 위원장, 중국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초청으로 중국 비공식 방문  
김정일 위원장 비공식 중국 방문(5.3~7)중,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의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 표명
- 5.14~15 북한, 중통 보도를 통해 NPT 탈퇴 및 핵보유 정당성 주장, 대량살상 무기 전파와 관련 북한을 비난한 이스라엘 외무상의 주장을 외무성 대변인의 회견을 통해 반박
- 5.16 북한 장령급군사회담 명의 전통문, 5.1부터 빠라·소형라디오·1USS·DVD 살포를 종장 목인하고 있다고, 비난, 경고한대로 유통통행 제한 차단 이상 조치 취할 것이라고 위협
- 5.1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 평양 소집” 결정 발표
- 5.21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 조사결과 발표가 북침전쟁 구실을 위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국면으로 간주, 북남관계 모든 문제에 단호히 대처 등 주장
- 5.21 남한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 북한측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전협정 관리체제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
- 5.21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천안함 조사결과가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하면서 비핵화 과정까지 전면 차단시켰다고 비난
- 5.30 북한, 김일성 광장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10만여명 참가)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6.7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 개최, 내각 총리 소환 및 선거, 조직문제 논의
- 6.8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표, 안보리 의장에게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 발송
- 6.12~23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방문한 한상렬 목사의 방북일정 상세보도
- 7.15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미·북 장령(장성)급회담 실무절차 문제 토의를 위한 미·북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 판문점 진행
- 7.17 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총화와 3/4분기 실행대책 논의
- 7.20~8.7 북한 박의춘 외무상,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개국 방문
- 7.22~27 북한, 정전협정 57주년 중앙보고대회 진행, 각종 경축행사 개최
- 7.23 판문점 제2차 미·북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 진행
- 7.24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제2의

- 군사적 도발'로 규정, '보복성전' 등 강경한 입장 천명
- 7.30 제3차 유엔사·북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 판문점 진행
- 8.3 북한,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문, 서해 해상훈련(8.5~9) 군사적 도발로 비난
- 8.10 제4차 유엔사·북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 판문점 진행
- 8.20~22 북한, 일본의 『한일합병조약』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역사학학회 비망록,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발표
- 8.22~30 북한, '한일합병' 100주년 북조선사회민주당과 남민주노동당 공동호소문, 북한법률가학회 백서,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 대변인 담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 등을 통해 대일비난 집중 전개
- 8.23~29 북한, 대통령 8.15 경축사, '통일세' 제안에 대해 '북 급변사태와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둔 망발' 비난
- 8.25~27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면담, 억류된 곱즈씨와 귀환
- 8.26~29 북한, 당대표자회 개최 관련 시·구역·군당 대표회, 도단위 당대표회 개최
- 8.26~30 김정일위원장,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비공식 방문
- 9.3~9.4 북한, 제7호 태풍 '곶파스'로 인해 황해도, 강원도 등 총 17,813여 정보 농경지 침수 피해
- 9.6 북한, 8.8 나포한 '대승호'를 동포애적·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9.16 유엔사·북한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 판문점 진행
- 9.2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강석주를 내각 부총리로, 김계관을 외무성 1부상으로, 이용호를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
- 9.28 북한, 김정일 참석, 당 대표자회 개최
- 9.30 남북 군사실무회담 판문점 남측지역 진행
- 10.1~2 북한 노동당 대표단 중국 방문, 후진타오 주석 면담, 북·중 친선협력 관계 협의
- 10.5 유엔사·北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 판문점 진행
- 10.7 북한, 조선 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 고령자 후원기금 신설
- 10.23 북한 노동당 친선 대표단 중국 방문,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 면담 및 중국 동북지역 시찰 등 북·중 친선협력 관계 도모
- 10.23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0주년 기념' 귀보송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비롯 고위군사대표단 방북
- 10.25 북한, 김정일·김정은 중국 참전 60주년 군중대회 참석
- 10.27 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토의
- 유엔사·北 군부 대좌(대령)급 실무접촉 판문점 진행



- 10.29 북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2호 초고전력 전기로 조업식
- 11.3 북한 최영림(정치국 상무위원) 총리, 중국 비공식 방문, 길림성 장춘시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
- 11.6 조선중앙통신, ‘조명록(82세)’ 심장병 사망 발표
- 11.11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우리 정부 ‘추후 통보’ 방침 비난 및 11.19 북남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 11.18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 ‘남북적십자회담시 관광 재개 회담 관련 문제 협의’ 거듭 제의
- 11.20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답변을 통해 유엔총회 제65차 회의의 3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 전면 배격 발표
- 11.23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등 일련의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연평도 포격도발’을 ‘北의 자위조치’라고 왜곡·선전, NLL 무력화 및 서해 분쟁수역화 시도
- 11.30 북한, 로동신문 등을 통해 경수로 건설, 대규모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중이라고 주장
- 11.30 북한 최태복, 중국 공식방문
- 11.30~12.4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중국 방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과 회담
- 12.3 북한 최태복 의장, 중국 지린 방문
- 12.9 북한 김정일 위원장, 중국 국무위원 다이빙귀 국무위원 접견, 북·중 친선협조관계 발전 및 상호 관심 문제 논의
- 12.14 북한 김정일, 6자회담 전제조건 사실상 거부
- 12.16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 34일 만에 군부대 시찰
- 12.20 북한, IAEA 사찰단 영변 핵시설 복귀허용
- 12.31 신의주-단동 신압록강대교 착공식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통일정세분석

##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운,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 Studies Series

##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n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타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ark Young Ho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b>회원가입신청서</b>				
성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0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10~20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